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1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11.

발 의 자 : 송석준 · 김형동 · 김상훈
태영호 · 윤창현 · 배준영
최승재 · 유경준 · 이현승
성일종 · 추경호 · 정경희
이양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·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,

이에 ①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「형법」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, ②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,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③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, ④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·추징하도록 하며,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

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·추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「형법」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함(안 제25조).
- 나.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,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26조의2 신설).
- 다.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함(안 제26조의3 신설).
- 라.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·추징하도록 함(안 제28조제2항).
- 마.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·추징의 적용을 하지 않음(안 제28조제3항).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중 “제129조부터”를 “제127조 및 제129조부터”로 한다.

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공공개발 사업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 ① 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공사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3(준법감시관) ① 공사는 임원 및 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둔다.

② 제1항의 준법감시관은 감사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
 4.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③ 제1항의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, 매년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의 준법감시관의 임명, 자격, 업무범위,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벌칙) ①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.

③ 제2항의 몰수 또는 추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	제25조(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) ----- ----- ----- -----제127조 및 제129조부터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공공개발 사업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 ① 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공사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

<신 설>

다.

제26조의3(준법감시관) ① 공사는
임원 및 직원이 공공개발 사업
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
용하여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
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
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
를 둔다.

② 제1항의 준법감시관은 감사
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
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
장관이 임명한다. 다만,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될
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
은 사람
 4.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
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
람
- ③ 제1항의 준법감시관은 공사
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

제28조(벌칙)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진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거래 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, 매년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준법감시관의 임명, 자격, 업무범위,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(벌칙) ①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.

③ 제2항의 몰수 또는 추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